# 최욱진 행정학 2020 군무원 9급 총평 및 해설

수험생 여러분, 행정학 강사 최욱진입니다. 힘든 시험을 치르느라 애쓰셨습니다. 시험에 대한 총평을 간단히 표현하자면, '아쉽고, 속상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수험생이 인생을 걸고 치르는 시험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엽적인 부분에서 출제된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총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1. 난이도: 매우 어려움**

이번 시험의 난이도는 일반 공무원 7·9급 문제보다 매우 어렵게 출제되었습니다. 공무원과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며, 일반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지거나 나오지 않았던 영역에서 출제되었습니다. 이는 과거의 경향에서 상당히 벗어나는 편입니다. 이에 따라 행정학 점수는 상당히 떨어질 거라 봅니다. **저의 주관에 비추어 봤을 때 70~75점을 받으셨다면 준수한 점수입니다.**

**2. 논란이 예상되는 문제: 3문제**

현재 가답안이 공개된 상황이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 견해로는 3문제가 있는데, 해설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3. 앞으로의 방향성: 군무원 시험의 특이성 강조**

이번 시험은 과거의 군무원 시험, 일반 공무원 시험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출제된 면이 있습니다. 물론 시험이라는 것은 약간의 추세를 살펴야 하지만 내년 시험을 준비할 때는 올해 출제된 영역에 대한 근거와 뿌리를 밝혀서 이를 대비해야 합니다. 이는 강사의 역할이 되겠고요. 만약 이런 방향성으로 시험이 출제된다면 공무원 시험과 차별화되는 경향이 짙어질 것입니다.

**4. 마치는 글**

우선 시험 후에 시험에 대해 알려준 학생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이번 시험의 최대 피해자는 경력경쟁시험을 치른 분들일 거예요. 아마 절대적인 점수를 받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경향으로 출제할 경우 공부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서 수험생의 입장에서 시험을 준비하기 너무 힘들어집니다. 출제자가 이런 부분까지 섬세하게 고려하지는 않아서 아쉬움이 남는 시험입니다. 이상으로 시험에 대한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욱진 드림 -**

**1. 행정학의 기술성과 과학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왈도(D. Waldo)가 'practice'란 용어로 지칭한 기술성은 정해진 목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달성하는가 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② 윌슨(W. Wilson) 등 초기 행정학자들은 관리기술이나 행정의 원리 등을 발견하려는 데 초점을 두고 행정학의 기술성을 강조하였다.

③ 행태주의 학자들은 행정학 연구에서 처방보다는 학문의 과학화에 역점을 두고 가설의 경험적 검증 등을 강조했다.

④ 현실 문제의 해결은 언제나 과학에만 의존할 수 없으므로 행정학은 기술성과 과학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정답 ①

해설: 왈도가 아니라 사이먼이 언급한 내용임; 사이먼이 'practice'란 용어로 지칭한 기술성은 정해진 목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달성하는가 하는 방법을 의미함; 왈도(D. Waldo)는 기술성을 'art' 혹은 'professional'이란 용어로 지칭하는 기술성은 행정의 활동 자체를 처방하고 치료하는 행위를 뜻함

② 윌슨(W. Wilson) 등 초기 행정학자들은 능률적인 관리를 위한 관리기술이나 행정의 원리 등을 발견하려는 데 초점을 두고 행정학의 과학성을 강조했으나, 이들이 언급한 법칙은 과학적 검증을 거치지 못한 원리인 까닭에 훗날 사이먼으로부터 원리가 아닌 격언이라는 비판을 받음; 결과적으로 관리주의와 관련된 학자들은 과학성이 아닌 기술성에 가까운 특징을 지님; 이에 따라 관리주의를 기술적 행정학으로 명명하기도 함

※ 참고: 정치행정일원론은 통치기능설이라 불리는 바 기능적 행정학으로 보는 견해도 있음

③ 행태주의 학자들은 현상에 대한 인과법칙을 발견하려는 과학성을 중시했기 때문에 행정학 연구에서 처방보다는 학문의 과학화에 역점을 두고 가설의 경험적 검증 등을 강조함

④ 현실 문제의 해결은 언제나 과학에만 의존할 수 없으므로 행정학은 문제해결(기술성)과 법칙의 발견(과학성)을 모두 고려하여야 함

**2. 디목(M. Dimock)의 사회적 능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회적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개념이다.

② 행정의 사회 목적 실현과 관련이 있다.

③ 경제성과 연계될 수 있는 개념이다.

④ 최소의 투입으로 최대의 산출을 추구한다.

정답 ④

해설: 최소의 투입으로 최대의 산출을 추구하는 것은 기계적 능률성임

① 사회적 능률성은 국가위기시에 등장한 정치행정일원론에서 주장한 개념으로써 경제대공황으로 인해 발생한 빈자 및 실업자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했기 때문에 사회적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개념으로 볼 수 있음

②③

사회적 능률성은 국가위기를 해결하려는 행정의 사회 목적 실현과 관련이 있으며, 인간적 능률이라는 관점에서 인간의 만족과 목적 등을 고려하고, 이차적으로 능률을 생각하는 바 경제성과 연계될 수 있는 개념임

**3. 레비트(H. J. Leavitt)가 제시하는 조직 혁신의 주요 대상 변수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업무
② 인간
③ 구조
④ 규범

정답 ④
해설: 레비트에 따르면 조직의 혁신을 위해 고려할 변수는 과업, 인간, 기술, 구조임

**※ 조직 혁신의 대상 변수**
조직 혁신의 대상 변수는 레비트(H. J. Leavitt)에 의하면 조직 내에만 과업, 인간 기술, 구조의 4개의 주요 조직 혁신의 변수가 있으며, 이들은 상호 연관되어 있는 복합적인 관계임

① 과업(task): 조직 내 기본적인 활동; 예컨대 사기업의 경우라면 재화를 생산하는 활동
② 인간(people): 조직 내에 소속된 구성원
③ 기술(technology): 업무를 수행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술이나 기계 등을 의미함
④ 구조(structure): 의사전달, 권위, 재래 등과 같은 여러 체제를 가리킨다.

레비트에 따르면 조직 혁신은 이들 중의 어느 한 대상을 변화시켜 다른 변수들의 변화를 꾀하는 것임; 예를 들어, 컴퓨터라는 기술의 도입은 인간의 태도, 기능 및 활동에 영향을 끼치고, 구조적인 측면의 변화를 일으킬 것이며, 과업의 내용이나 수준 등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음

**4.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에서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치구
② 인구 30만 이상의 도시
③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
④ 특별자치도

정답 ②
해설: 지방자치법에서는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특례를 인정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특례**
**지방자치법 제173조(자치구의 재원)**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 상호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동법 제174조(특례의 인정)** ① 서울특별시의 지위·조직 및 운영에 대하여는 수도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②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조직 및 행정·재정 등의 운영에 대하여는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 5. 30.>

**동법 제175조(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 5. 30.>

**5. 행정학에서 가치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관심을 끌기 시작한 학문적 계기로 옳은 것은?**
① 신행정론의 시작
② 발전행정론의 대두
③ 뉴거버넌스 이론의 등장
④ 공공선택론의 태동

| |
|---|
| 정답 ①<br>해설: 행정학에서 가치의 연구, 즉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성에 대한 고민은 격동기에 등장한 후기행태주의로부터 시작되어 신행정학에 영향을 주었음; 따라서 ①이 정답임 |

**6. 사이먼(H. A. Simon)의 정책결정만족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이먼(H. A. Simon)은 합리모형의 의사결정자를 경제인으로, 자신이 제시한 의사결정자를 행정인으로 제시한다.
② 경제인은 목표달성의 극대화를, 행정인은 만족하는 선에서 그친다.
③ 경제인은 합리적 분석적 결정을, 행정인은 직관, 영감에 기초한 결정을 한다.
④ 경제인은 복잡하고 동태적인 모든 상황을 고려하지만, 행정인은 실제 상황을 단순화시키고, 무작위적이고 순차적으로 대안을 탐색한다.

| |
|---|
| 정답 ③<br>해설: 직관 및 영감에 기초한 결정을 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모델은 드로어의 최적모형임; 사이먼의 만족모형은 의사결정자를 제한된 합리성 상태에 있는 행정인으로 간주하면서 만족할 만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현상을 설명함; 행정인은 모든 대안을 탐색 및 비교하지 못하는 까닭에 실제 상황을 단순화시키고, 무작위적이고 순차적으로 일부의 대안을 탐색함 |

**7. 민영화에 대한 문제점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성의 침해
② 서비스 품질의 저하
③ 경쟁의 심화
④ 행정책임확보의 곤란성

정답 ③
해설: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임; 민영화 과정에서 경쟁의 심화가 발생할 경우 경쟁력있는 서비스 공급자가 나타나서 더 나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품질의 저하가 올바른 선지로 처리되었음; 추후 ②와 ③은 복수정답 처리의 여지가 있음

**※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근거**

**1. 행정학 교과서**
민간위탁이란 넓은 의미에서는 민영화의 한 형태이다. 민간위탁의 긍정적 성과로는 공공서비스의 질적 수준 개선, 전문기술과 지식의 활용, 정부기구와 인력 및 예산의 감축과 간소화 등을 들 수 있다.
- 이종수·윤영진 외 공저 새행정학(2005)

**2. 기존 기출문제**
**Q. 다음 중 신공공관리론 등이 중시하는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 목적이 아닌 것은? 2010 전환특채 8·9급**
① 공공서비스 능률 향상 ② 시장실패의 치유
③ 작은 정부의 구현 ④ 재정적자의 완화

정답 ②
해설: 해당 문제에서 공공서비스의 능률 향상은 민영화 추진의 목적으로 보고 있음

**8. 조세지출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과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을 통해 포기한 액수를 조세지출이라 한다.
② 지방재정에는 지방세지출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다.
③ 조세지출의 내용과 규모를 주기적으로 공표해 관리하는 제도이다.
④ 국가재정법에 따라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해 국가에 보고한다.

정답 ②
해설: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에도 지방세지출제도가 도입하여 지방세특례제한에 따라 적절한 세금감면을 위한 통제를 하고 있음

① 정부가 받아야 할 세금을 비과세, 조세감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대세율 적용, 과세이연(세금 납부시점 연기) 등의 세제혜택을 통해 받지 않고 포기한 액수를 조세지출이라고 하며,
③ 조세지출의 내용과 규모를 주기적으로 공표해 관리하는 제도를 조세지출예산제도라고 함
④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해 국가(국회)에 보고함
국가재정법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0.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

9. 에치오니(A. Etzioni)의 조직목표 유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질서 목표
② 문화적 목표
③ 경제적 목표
④ 사회적 목표

정답 ④
해설: 에치오니는 권한 및 복종의 형태를 중심으로 조직유형을 구분했는데, 각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는 아래의 목표와 같음; 이 중에서 사회적 목표를 추구하는 조직유형은 없음

※ 에치오니 조직유형

| 권한 및 복종의 형태 | 조직의 유형 및 예시 | 추구하는 목표 |
|---|---|---|
| • 권한: 강제적 권한<br>• 복종: 굴복적인 복종 | • 조직의 유형: 강압적 조직<br>• 예시: 교도소 | 질서유지 목표 |
| • 권한: 공리적(보수적) 권한<br>• 복종: 타산적 복종 | • 조직의 유형: 공리적 조직<br>• 예시: 대부분의 사기업 | 경제적 목표 |
| • 권한: 규범적 권한<br>• 복종: 도덕적 복종 | • 조직의 유형: 규범적 조직<br>• 예시: 종교단체 | 문화적 목표 |

10. 테일러(F. W. Taylor)의 과학적 관리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테일러(F. W. Taylor)는 과학적 관리의 핵심을 개인적 기술에 두고, 노동자가 발전된 과학적 방법에 따라 작업이 되도록 한다.
② 어림식 방법을 지양하고 작업의 기본 요소 발견과 수행방법에 대해 과학적 방법을 발전시킨다.
③ 과업은 일류의 노동자만이 달성할 수 있는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④ 노동자가 과업을 완수하는 경우 높은 보상, 실패하는 경우 손실을 받게 된다.

정답 ①
해설: 테일러(F. W. Taylor)는 과학적 관리의 핵심을 관리자의 '시간과 동작연구'를 통해 발견한 유일 최선의 길로 간주하고 노동자는 이러한 방법에 따라 훈련하고 생산해야 함을 강조

② 테일러는 어림식 방법을 지양하고 작업의 기본 요소 발견과 수행방법에 대해 과학적 방법을 발전시켰으며,
③ 조직의 최대 성과를 위해 과업은 일류의 노동자만이 달성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동자를 훈련시켰음
④ 테일러는 인간을 경제인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노동자가 과업을 완수하는 경우 높은 보상, 실패하는 경우 손실을 받는 체계를 마련하였음

11. 매트릭스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중의 명령 및 보고체제가 허용되어야 한다.
② 기능부서의 장과 사업부서의 장이 자원배분권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조직구성원 간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에 기여한다.
④ 조직의 성과를 저해하는 권력투쟁이 발생하기 쉽다.

정답 ③
해설: 매트릭스 조직은 기능부서와 사업구조의 화학적 결합을 시도한 이원적 권한체계를 지니므로 조직구성원을 공유하지만, 조직의 성과를 저해하는 권력투쟁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조직구성원 간(기능구조의 장과 사업구조의 장)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을 저해할 수 있음

12. 파슨스(T. Parsons)의 조직유형 중 조직체제의 목표달성기능과 관련된 유형으로 옳은 것은?
① 경제적 생산조직
② 정치조직
③ 통합조직
④ 형상유지조직

정답 ②
해설: 파슨스의 조직유형 중 조직체제의 목표달성기능과 관련된 유형은 정치조직임

**※ 파슨스의 조직유형**

| 조직유형 | 기능 | 예시 |
|---|---|---|
| 경제조직 | 자원조달 및 환경적응 | 민간기업 |
| 정치조직 | 방향성 제시 | 정당, 의회 등 |
| 통합조직 | 일탈방지 및 갈등조정 | 경찰서, 법원 등 |
| 체제유지<br>(현상유지; 형상유지)조직 | 이데올로기 유지 | 교육기관, 종교기관 등 |

13.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주 15~35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일반 공무원처럼 시험을 통해 채용되고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으로 옳은 것은?
①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②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③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④ 한시임기제 공무원

정답 ③
해설: 문제의 요건을 충족하는 공무원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임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임용)**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을 신규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용된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의 주당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다. 이 경우 근무시간을 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①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통상적인 근무를 하던 공무원이 일시적으로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제도

**공무원 임용령 제57조의3(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이 원할 때에는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②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한다.

②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이지만, 정년이 보장되지 않고 일정기간 근무하는 공무원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종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 시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 또는 전문임기제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

④ 한시임기제 공무원: 임기제공무원의 종류 중 하나로써 특정 공무원의 사정으로 일정 기간 대체하는 공무원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임기제공무원의 종류】** 임기제공무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2. 16., 2015. 7. 13., 2015. 11. 18., 2017. 12. 29.>
4. 한시임기제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1년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

**14. 정부조직 개편으로 예산을 조직간 상호 이용하는 것으로 예산의 원칙 중 목적 외 사용 금지원칙의 예외인 것으로 옳은 것은?**

① 예산의 전용
② 예산의 이체
③ 예산의 이월
④ 예산의 이용

정답 ②
해설: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임 → ④로 변경가능성 있음

㉠ 문제의 요지는 1) 정부조직 개편, 2) 조직간 상호 이용, 3) 한정성 원칙의 예외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개념을 찾으라는 것

㉡ 우리나라 국가재정법에는 '이용(移用)'에 대해 47조에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45조에서 명시된 한정성 원칙의 예외임; 만약 출제자가 45조를 넓게 해석하여 47조의 이체도 한정성 원칙의 예외로 간주하더라도, 47조에 명시된 것처럼 이용과 이체는 다른 개념이며, 문제에서는 '이용'이라고 표현하고 있음

㉢ 아래의 국가재정법에서 예산의 이용은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음
① 장·관·항 간에 상호 이용: 47조 1항
②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는 때: 47조 2항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국가재정법 제47조(예산의 이용ㆍ이체)**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또는 각 장ㆍ관ㆍ항 간에 상호 이용(移用)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따라 그 예산을 상호 이용하거나 이체(移替)할 수 있다.

㉣ 47조에 따르면 정부조직을 개편할 때도 이용을 할 수 있음; 아울러 이용과 이체는 엄연히 다른 표현이고, 문제에서 이용이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문제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것은 '이용'이라고 할 수 있음

㉤ 참고: 예산의 이체는 사업내용이나 규모 등에 변경을 가하지 않고 해당 예산의 귀속만 변경하는 것으로써, 어떤 과목의 예산부족을 다른 과목의 금액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당초 예산의 내용을 변경(목적변경)시키는 예산의 이용 및 전용과는 구분됨

**15. 현대적 행정이념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민주성
② 가외성
③ 신뢰성
④ 성찰성

정답 ①
해설: 행정이념은 본질적 가치와 수단적 가치로 구분하고 각각의 가치는 국가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강조된다는 주장이 일반적인 행정학 교과서의 견해지만, 본 문제에서는 행정학 강의(권기헌 저)에서 발췌하여 출제하였음; 저자는 행정이념을 본질적, 수단적, 현대적 가치로 구분하고 이 중에서 현대적 가치는 가외성, 신뢰성, 성찰성이 중시된다는 주장임

※ 성찰성(당위성): 정책을 집행할 때 능률성에 집착할 경우 오히려 정책실패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환경에 대한 고려, 주민의 삶과 인근 부락에 대한 고려, 정책이 국민 전체에 미치는 가치와 민의(民意)에 대한 고려 등 보다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맥락지향적 탐색을 요구하는 것

**16. 윈터(S. Winter)가 제시하는 정책집행성과를 좌우하는 주요 변수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형성과정의 특성
② 일선관료의 행태
③ 조직 상호간의 집행행태
④ 정책결정자의 행태

정답 ④
해설: 정책결정자의 행태는 윈터가 제시한 집행성과를 좌우하는 요인에 해당하지 않음; 윈터는 통합모형을 제시한 학자로써 정책집행의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네 가지 중요한 변수를 설정하고, 그러한 변수들이 하나의 모형에서 융합될 수 있는 방법을 제기함으로써 새로운 통합을 시도하고자 하였음

※ Winter가 제시한 정책집행 성과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
1) 정책형성과정의 특성
2) 조직내 혹은 조직상호간의 집행행태
3) 일선집행관료의 행태
4) 정책대상집단의 행태
- 위의 변수 중에서 1)은 정책형성과정에 해당하며, 나머지는 집행과정에서 집행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

**17. 시·군 통합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의 대응성 제고
② 규모의 경제 실현
③ 생활권과 행정권의 일치
④ 광역적 문제의 효과적 해결

정답 ①
해설: 자치단체를 결합할 경우 보다 넓은 지역에 대한 행정수요를 하나의 지자체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음; 아는 광역행정의 긍정적 효과와 동일함; 다만 통합을 통한 광역행정은 자칫 지역의 특수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에 대한 대응성을 감소시킬 수 있음

**18. 진보주의 정부에서 선호하는 정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조세 감면 확대
② 정부규제 강화
③ 소득재분배 강조
④ 소수민족 기회 확보

정답 ①
해설: 진보주의 정부는 정부의 규제와 활동을 증대하는 정부관에 해당함; 따라서 진보주의 정부에서 조세 감면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조세를 거두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활동을 증대할 수 있음

**19. 옴부즈만(Ombudsman)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스웨덴에서 처음 도입된 제도이다.
② 행정 내부통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이다.
③ 시정을 촉구하거나 건의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이다.
④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입법부에 소속되어 있다.

정답 ②
해설: 옴부즈만 제도는 다른 통제기관(입법부 혹은 사법부)들이 간과한 통제의 사각지대를 감시하는 데 유용한 제도임; 즉, 옴부즈만제도는 입법·사법통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임

①③④
행정활동의 비약적인 증대에 따른 시민의 권리침해 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구제제도를 두기 위해 1809년 스웨덴에서 최초로 도입하였으며, 현재 유럽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에서 활용하고 있는 행정통제 수단임; 옴부즈만은 입법부 소속형과 행정부 소속형으로 구분되는데, 일반적인 옴부즈만 제도는 전자에 해당함

**20. 공무원의 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규채용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통해 채용하지만 퇴직공무원의 재임용의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의한다.

② 전입은 국회·행정부·지방자치단체 등 서로 다른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의 인사이동을 의미한다.

③ 고위공무원단이나 그에 상응하는 계급으로의 승진은 능력과 경력을 고려하며, 5급으로의 승진은 별도의 승진시험을 거쳐야 한다.

④ 국가직은 고위공무원단을 포함한 1급~2급에 해당하는 직위 모두를 개방형 직위로 간주한다.

정답 ④

해설: 고위공무원단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개방형 직위의 방법도 있으나 승진임용도 가능함

**국가공무원법 제16조(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소속 장관은 법 제40조의2 제1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하려는 때에는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중에서 근무성적, 능력, 경력, 전공 분야, 인사교류기간등, 인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임용령 제34조의3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거쳐 임용예정 직위의 2배수 이상 3배수 이하에 해당하는 인원을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한 후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승진 심사를 거쳐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30.>

① 신규채용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통해 채용하지만 퇴직공무원의 재임용의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의함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① 공무원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채용한다. <개정 2011. 5. 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1. 제70조 제1항 제3호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제71조 제1항 제1호의 휴직 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② 전입은 국회·행정부·지방자치단체 등 서로 다른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의 인사이동을 의미함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2(전입)**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 상호 간에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을 전입하려는 때에는 시험을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 자격 요건 또는 승진소요최저연수·시험과목이 같을 때에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험의 일부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고위공무원단이나 그에 상응하는 계급으로의 승진은 능력과 경력을 고려하며, 5급으로의 승진은 별도의 승진시험을 거쳐야 함

**국가공무원법 제40조(승진)** ①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그 밖에 능력의 실증에 따른다. 다만, 1급부터 3급까지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의 경우에는 능력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임용하며,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의 경우에는 승진시험을 거치도록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21.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총괄예산제도

② 예산의 이용

③ 예산의 전용

④ 예산의 재배정

정답 ④

해설: 예산의 배정과 재배정은 확정된 예산을 예산집행기관이 계획대로 집행(의회가 결정한 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일종의 승인이기 때문에 집행과정의 통제확보 수단임

① 총괄예산제도

**국가재정법 제37조 【총액계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서 세부내용을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사업의 경우에는 이를 총액으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③

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자금의 융통에 해당하므로 집행과정에서 유연한 집행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임

**동법 제47조 【예산의 이용·이체】**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또는 각 장·관·항 간에 상호 이용(移用)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따라 그 예산을 상호 이용하거나 이체(移替)할 수 있다.

1. 법령상 지출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 및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
2. 환율변동·유가변동 등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3.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동법 제46조 【예산의 전용】**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2.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이 인정하는 주민의 직접 참여제도로 옳은 것은?**

① 주민발안, 주민소환
② 주민소환, 주민참여예산
③ 주민투표, 주민감사청구
④ 주민소송, 주민총회

정답 ③
해설: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임; 과거 기출문제를 살펴봤을 때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이 인정하는 주민의 직접 참여제도는 주민발안(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주민소환, 주민투표,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제도가 있음 → 따라서 ①과 ③모두 정답이 될 수 있음; 출제자는 주민의 조례개폐청구권이 주민에 대하여 발의권만을 인정하고 그 결정을 지방의회에 유보하는 것이므로 직접참여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 것 같지만, 행정학 교과서나 시험에서는 조례개폐청구권도 직접참여제도로 인정하고 있음

**※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근거**

**1. 행정학 교과서**
'이종수·윤영진 외 공저, 새행정학(2005)'에서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제도와 주민소환제도를 주민의 직접참여제도로 인정하고 있음; 아래의 내용은 교과서의 문구임

주민의 직접참여가 강조되고 있다. ----(중략)--예컨대, 주민감사청구제도, 주민조례발의제,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도 등이 이에 속한다. - p.625의 내용 中

**2. 행정학 관련 문헌**

결국 선거가 주민들의 의사표현의 가장 유력한 수단이 된다. 그런데 이러한 간접민주제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면 지방자치를 따로 실시하는 의미가 약화되기에 지방자치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직접민주제의 요소를 최대한 도입하고자 한다. 이것이 바로 주민참여인데 주민투표나 주민들의 조례제정개폐청구, 감사청구 그리고 주민소송, 주민소환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 이상희, 지방자치법 해설 中

**3. 기존 기출문제**

**Q. 다음 중 우리나라 주민직접참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2014. 국회9급**
① 2014년 현재 지방자치법상 주민직접참여제도로는 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소환만이 인정되고 있다.
② 지방의회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③ 주민투표법은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국가정책에 관해 주민투표를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④ 주민소송의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는 주민소송법을 따르고, 행정소송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⑤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소환의 대상이 아니다.

정답 ⑤

해설: ①의 경우 주민의 직접 참여제도로 조례개폐청구, 주민감사청구 등이 누락되어서 틀린 선지로 처리

**Q. 우리나라의 주민직접참여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5. 서울 9급**
① 주민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③ 주민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한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정답: ④

해설: 해당 문제는 ①에서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를 직접참여제도로 인정하고 있으며,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는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음; 또한 문제에서 ④의 경우처럼 주민소환제도도 주민의 직접참여제도로 명시하고 있음

**23. 엽관주의 인사제도가 필요한 이유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행정의 안정성과 계속성 확보
② 행정의 공정성 확보
③ 국민의 요구에 대한 관료적 대응성 향상
④ 유능한 인재 등용

정답 ③
해설: 엽관주의는 정당에 대한 충성도를 기준으로 공무원을 임용하는 제도로써 1829년에 잭슨 대통령이 공식적인 제도로 도입하였음; 이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기민하게 반응하지 못하면 집권정당이 바뀌고, 이에 따라 행정부를 구성하는 공무원도 경질되는 바 행정의 대응성 및 민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인사행정제도임

①②④
엽관주의는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반대하기 때문에 행정의 안정성 및 계속성을 떨어뜨리며, 시험이 아닌 정당충성도에 따라 공무원을 충원하는 바 행정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저하시킬 수 있음

**24. 정책유형별 사례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 구성정책: 국경일의 제정, 정부기관 개편
② 보호적 규제정책: 최저임금제, 장시간 근로제한
③ 추출정책: 조세, 병역
④ 분배정책: 보조금, 사회간접자본

정답 ①
해설: 구성정책은 공식적인 제도를 수정 및 신설하는 정책인데, 국경일의 제정은 국민의 자긍심을 제고하는 상징물을 정하는 상징정책에 해당함

② 최저임금제, 장시간 근로제한 등은 일반 대중을 보호하는 보호적 규제정책임
③ 추출정책은 국민으로부터 돈 혹은 물리적인 노동을 추출하는 정책으로써 조세, 병역 등이 있음
④ 분배정책은 특정 집단이나 지역에 편익을 제공하는 정책이며, 보조금 및 사회간접자본 등은 분배정책의 예시임

**25.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및 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직유관 단체에는 공기업이 포함된다.

② 재산등록의무자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이다.

③ 등록할 재산에는 본인의 직계존속 것도 포함된다.

④ 등록할 재산에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 것은 제외한다.

정답 ②

해설: 재산등록의무자는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임

**공직자윤리법 제3조 【등록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3.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① 공직유관 단체에는 공기업이 포함됨

**동법 제3조의2 【공직유관단체】** ①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규모, 임원선임 방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2. 공기업

③ 등록할 재산에는 본인의 직계존속 것도 포함됨

**제4조 【등록대상재산】** ①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재산(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과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3.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다만,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한다.

④ 등록할 재산에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 것은 제외함

**제4조 【등록대상재산】** ①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재산(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과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3.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다만,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한다.